



#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662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9년 1월 28일 (음력 12월 23일) 월요일

## 한전공대 '오늘 입지 발표' ...광주·전남 초긴장

한전공과대학(일명 켄코텍·Kepco Tech) 최종 입지 선정 발표를 하루 앞둔 27일 광주와 전남지역 지자체들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8일 발표 결과에 따라 공대 설립 입지로 선정된 지자체는 촉매를 들지만, 탈락한 지자체는 상실감과 함께 지자체정의 경우 향후 정치적인 행보에도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대 입지 선정을 위해 전문 용역사 'A.T.Keamey'

**심사위 1·2단계 심사 완료 '결과 봉인'...점수합산 발표**

**오전 11시 정부 서울청사 국가균형발전위 사무실서 개봉**

(A.T.커니)를 통해 그동안 광주·전남지역 지자체가 제안한 후보지 6곳에 대한 심사를 벌여왔다.

용역사 내 꾸러진 입지 선정 심사위는

지난 28일 광주시와 전남도를 상대로 서울 사무실에서 첫 번째 심사 절차로 지자체별 입지 제안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했다.

24일에는 선정위원들이 오전과 오후로 나

눠 광주지역 후보지 3곳과 전남지역 후보지 3곳에 대한 현장 실사도 벌였다.

25일에는 용역사 주관으로 전남 현장 실사 결과를 토대로 1·2단계 평가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입지여건 등을 평가하는 1단계 평가는 65점이 만점이다. 심사위원들은 평가를 거쳐 6곳의 후보지 중 '광주 1곳·전남 1곳' 등 총 2곳을 2단계 후보지로 압축했다.

이어 심사위원들은 곧바로 2곳으로 압축된 후보지를 대상으로 2단계 평가를 실시했다. 총 35점 만점의 2단계 평가에서는 부지 조성 비용과 경제성, 지자체 재정지원 항목 등을 따져 점수를 부여했다.

입지 선정 심사위는 위원들이 각각 적어낸 평가 점수표를 이날 바로 합산하지 않고, 즉시 봉인 조치했다. 봉인된 점수표는 한전공대 입지 선정 발표가 예정된 28일 오전 11시 정부 서울청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리는 '한전공대 설립 법정부설 입지위원회'에서 개봉된다.

이날 지원위는 19명의 심사위원이 각각 적어낸 1·2단계 평가 점수를 모두 합산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후보지를 '한전공대 입지'로 최종 확정한다.

이후 지원위는 곧바로 본회의를 열고 한전공대 입지선정 공동위원장과 심사위원장 등에게 심사 결과를 설명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결과를 공개한다.

한전공대 부지 선정 최종 결과는 법정부설 입지위원장을 맡은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직접 발표한다.

한전공대 설립단 측은 기자회견장에서 준비한 입지 선정 배경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심사 과정의 투명성 입증 차원에서 '1·2순위 후보지' 평가 결과에 대해서만 세부 평가 점수표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서은홍 기자



**상춘객 북적이는 제주** 맑은 날씨를 보인 27일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산방산 인근 유채꽃밭을 찾은 상춘객들이 기념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 '건조한 날씨 지속' 전남 산불 비상체제 돌입

오는 5월15일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 헬기 7대 7권 권역 배치

전남도는 겨울철 건조한 날이 계속 되고 산림 인접지 소가에 따른 산불 위험요인이 늘어남에 따라 오는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도 및 시군에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산불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다.

봄철 산불특별대책기간 동안 신속한 감시와 초동진화를 위해 헬기 7대를 여수, 순천, 담양, 강진, 보성, 함평, 진도 등 7개 권역에

전진배치하고 산불 감시 진화인력 1120명을 시군별로 운영한다.

성묘객과 산림 휴양객이 많은 설 연휴와 3일간의 어린이날 연휴 등 긴 연휴와 주말에는 시기별로 특별대책을 운영하고 감시 인력도 위험지역에 집중 배치한다.

특히 이번 설을 앞두고 성묘객과 등산객으로 인한 산불 방지를 위해 설 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소각 금지 기간을 운영한다. 헬

기를 이용해 공중 계도방송과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등 산불 위험 취약지를 중심으로 예방 및 점검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8일 시군 산림보호담당회의를 개최한다.

장기간 비상근무에 따른 집중도 저하를 대비해 기상 여건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산불 경보' 발령과 해제를 유연하게 대처해 상황에 따른 역량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 도·시군 합동으로 산불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연접지 100m 이내에서 불을 지르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위반한 경우 과태료 100만 원 이하를 부

과하고,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산림보호법' 규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보진문 전남도 산림보전과장은 "대부분의 산불이 입산자 실화, 농산폐기물 소각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영농부산물 등은 파쇄기 등을 활용해 퇴비로 만드는 노력을 기울이는 등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올 들어 전남지역에서는 겨울가뭄이 계속되면서 나주, 진도, 보성, 강진, 완도 등에서 7건의 산불이 발생해 2.28ha의 산림이 소실됐다.

김정환 기자



단좌

내란죄·외환죄 형이 확정된 지 시면·복권 이 때도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다는 국가보훈처의 공식 판단이 처음 나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가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보훈처가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보훈처는 내란죄·외환죄 등의 형이 확정된 뒤 시면·복권을 받을 경우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한지를 묻는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의 질의에 대해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이 시면·복권된 경우에도 기형의 전과 사실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 결정 사유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12·12와 5·18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했다. 그해 12월 특별사면됐다.

피우진 보훈처장 등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서은홍 기자·자료사진=뉴스1



국립묘지 안장 안 된다



전두환



박지원

### 완도 해양치유로 몸과 마음 힐링하세요!

**해양기후**  
호흡기질환, 면역강화

**해수**  
재활운동, 혈액순환

**갯벌**  
근골격계 이완, 피부질환

**해조류**  
면역강화, 피부질환

청정한 기후환경과 최고 품질의 해양치유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해양치유산업 최적지입니다.

완도군에서는 2030년까지 1조원을 투입하여 해양헬스케어센터, 해양병원, 치유공원 등 공공시설과 해양리조트, 바이오기업 등의 민자시설이 복합된 해양치유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